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1. 18. (수요일)

제4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 공식총회, 분쟁 이후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책임 논의

- "재원 확보·수원국 주권·필수 서비스 보호를 둘러싼 토론 끝에 최종 결의문 공표" -



제4회 HLMUN 공식회의 (사진=hlmun press)

2026년 11월 18일 열린 제4회 한림대학교 모의유엔(HLMUN) 공식총회에서 각국 대사단은 '분쟁 이후 평화 정착과 경제 회복을 위한 국제 지원과 비용·역할 분담'을 의제로 결의안과 수정안을 심의했다. 가-1·가-2·가-3 결의안에 대한 토론과 표결을 통해 재원 확보와 배분, 수원국의 의사결정 참여, 지원의 지속성을 검토했다.

재건 재원 확보와 비재정적 기여의 인정 범위 논의

가-1 결의안 논의에서 모로코 대사단은 3년간 총 9억 달러의 평화구축 지원 목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6억 8천만 달러는 기존 재원으로, 2억 2천만 달러는 추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구상을 설명했다. 라이베리아 대사단은 기여금이 목표에 미치지 못할 경우를 고려해 사업 우선순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가 재원 마련 방안인 방산평화세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르완다 대사단은 조달 비용 상승과 불확실성을 우려하며 관련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모로코 대사단은 제시된 세율을 근거로 급격한 가격 상승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네덜란드와 라이베리아 등은 재원 공백을 보완할 대안을 요구했다. 해당 수정안은 찬성 2표, 반대 7표, 기권 1표로 부결됐다.

브라질 대사단은 기술·인력 등 비재정적 지원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제 지출 증빙으로 과대 산정을 방지하겠다고 설명했다. 독일 등은 평가액이 실제 지원 규모를 과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엄격한 산정 기준을 요구했다.

수원국의 주권 존중과 주민 보호 사이의 균형 모색

지원 사업의 집행 방식에서는 수원국 정부의 권한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르완다 대사단은 정부의 직접 집행 범위를 제한하면 주권과 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모로코 대사단은 해당 조항이 수원국의 주권을 존중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가-2 결의안 관련 토론에서 브라질 대사단은 수원국이 원하지 않는 사업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사업 종료 사유를 명확히 밝히는 방안을 설명했다. 네덜란드와 스웨덴 등은 정부의 결정이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필수 서비스의 공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이베리아 대사단 역시 수원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을 보장할 절차를 질의했다.

취약 지역의 지원 접근성과 현장에 맞는 평가 기준 강조

콜롬비아 대사단은 국가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민을 지원에서

후순위로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열악한 운영 여건을 이유로 지원을 제한하기보다 사업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관련 가-2-2 수정안은 찬성 7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성과에 따른 지원 조정에서는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본 대사단은 평가 수치보다 주민에게 제공되는 실질적인 도움을 살피고 의료식수 등 기초 서비스를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으며, 콜롬비아와 스웨덴 등은 구체적인 안전장치를 요구했다. 해당 가-3-2 수정안은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3표로 부결됐다.

한편, 제4회 HLMUN은 대사단의 사전 준비와 비공식회의를 통해 각국의 입장을 조율하고, 공식총회에서 결의안을 구체화하며 마무리됐다. 이번 총회는 학생들이 분쟁 이후 재건과 국제사회의 책임을 깊이 이해하고, 협상과 설득을 통해 공동의 해결책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서로 다른 입장 속에서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은 국제 협력의 의미와 중요성을 직접 배우는 값진 경험으로 남았다.

담당 부서 제4회 HLMUN PRESS팀	팀장	총괄	최다인
	팀원	기사 작성 및 번역	장서연, 송윤진, 최다인
한림대학교 총학생회 hallym40th_chanlan@naver.com			
한림대학교 제4회 모의유엔협회 hallymmun@gmail.com			